

Ⅰ 제1회 노동권익포럼 Ⅰ

2000년대 노동시장 주요 변화가 노동정책에 대해 주는 함의

Seoul
Labor
Center

일시 : 2015년 4월 28일(화) 10:00 ~ 12:00
장소 :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30호


서울노동권익센터

함계서울
시민과 함께 세계와 함께

프로그램

시 간	주 요 내 용
10:00~10:10	개회 및 인사말씀 김성희 (서울노동권익센터 센터장)
	사회 : 이 철 (서울노동권익센터 정책연구팀장)
10:10~10:50	발표. 2000년대 이후 노동시장의 변화가 노동정책에 주는 함의 - 발표자 :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10:50~11:20	토론 - 토론자 :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인력수급전망센터 센터장) - 토론자 : 김철식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전문연구원)
11:20~11:50	플로워 토론, 질의/응답
11:50~	폐회 및 만찬

목 차

<발표문>

2000년대 노동시장 주요 변화가 노동정책에 대해 주는 함의---01

1. 양극화 1
2. 임금 수준별, 종사상 지위별, 고용형태별 일자리 변동 6
3. 정책 함의 16

<토론문1>

노동시장 변화와 노동정책-----21

<토론문2>

표 목차

[표 1] 임금 수준별, 종사상 지위별 임금근로자 증감(2007년과 2014년)	6
[표 2] 임금 수준별, 종사상 지위별 임금근로자 증감(2002년과 2007년)	7
[표 3] 임금수준별, 산업별 임금근로자 증감	8
[표 4] 사업체 규모별 임금수준별 임금근로자 증감	9
[표 5] 임금 수준별, 연령대별 임금근로자 증감(2007년과 2014년)	10
[표 6] 연령구간별, 직업별 임금근로자 2007년 3월과 2014년 3월 간 증감	10
[표 7] 직업별, 연령별 취업자 변화	11
[표 8] 주요 업종의 직업별 고용성장	12
[표 9] 임금수준별, 비정규직 여부별 임금근로자 2007년 3월과 2014년 3월 간 증감	13
[표 10] 근로형태별 임금수준(시간당)	14
[표 11] 시기별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 변화 분해(시간당 임금)	15
[표 12] 임금계층별 성장률 차이가 전체 임금 인상률에 주는 영향	18

그림 목차

[그림 1] 중위임금별 산업×직종의 고용 몫 변화	3
[그림 2] 대졸자 비중별 산업×직종의 시기별 고용 몫 변화	3
[그림 3] 상대적 저임금 근로자 비중 추이	4
[그림 4] 임금불평등 추이	5
[그림 5] 성별 임금불평등 추이	5
[그림 6] 연령별, 성별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의 연도별 변화(남성 좌, 여성 우)	13
[그림 7] OECD 국가들의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2000년대 후반 기준)	16
[그림 8] OECD 국가들의 저임금 근로자 비중(2011)	17
[그림 9] OECD 국가들의 9대1 격차	17

Ⅰ 제1회 노동권익포럼 Ⅰ

2000년대 노동시장 주요 변화가 노동정책에 대해 주는 함의

Seoul
Labor
Center

일시 : 2015년 4월 28일(화) 10:00 ~ 12:00
장소 :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30호


서울노동권익센터

함계서울
시민과 함께 세계와 함께

2000년대 노동시장 주요 변화가 노동정책에 대해 주는 함의

성재민(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1. 양극화

- 2008년 국제금융위기 이전 우리나라 일자리 변동의 주요 트렌드는 일자리 양극화였음(성재민, 2014; 전병유, 2007)
 - 일자리 양극화는 중간숙련·중간임금 일자리는 줄고 고숙련·고임금 및 저숙련·저임금 일자리가 증가하는 현상을 일컫는 용어

- 왜 일자리 양극화가 발생하는지 - 세 가지 가설
 - ① 기술에 의한 반복적 업무 대체 가설(de-routinization)
 - “컴퓨터가 ① 정해진 룰(rule: 순서, 규칙)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는 업무(routine tasks)를 대체하며, ② 문제 해결, 복잡한 의사소통을 필요로 하는 업무를 보완한다”(Autor, Levy & Murnane, 2003, 1279쪽).
 - 컴퓨터 등 IT 기술의 진전으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조립공정, 단순 사무직 등 반복적 특성을 갖는 업무(routine task)들이 로봇, 컴퓨터 등으로 대체
 - 대신, 이들 장치를 다루는 고숙련 일자리, 추상적인 사고와 판단을 요구하는 고숙련 일자리,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성격의 숙련이 요구되는 일자리, 특별한 숙련을 요하지는 않지만 반복적 성격이 적어 기계나 컴퓨터 등으로 대체하기 힘든 일자리가 증가.
 - 이들은 컴퓨터로 대체하기 쉬운 업무로 → 기록업무, 계산, 반복적 고객 서비스, 반복적인 조립업무 등
 - 컴퓨터로 대체하기 어려운 고숙련 업무 → 의학적 처방, 가설 형성과 검증, 문서 작성, 설득, 관리 업무 등
 - 컴퓨터로 대체하기 어려운 저숙련 업무 → 청소, 트럭 운전 등
 - 그런데, 제조업의 조립 노동자나 단순 사무 업무는 숙련수준이 높지는 않지만 상당한 습숙기간을 요하거나 정확성을 요하기 때문에 대체로 노동시장에서 중간정도의 임금을 받는 일자리 특 → 이런 특성을 지니는 일자리의 수요 감소는 이들 일자리의 임금 감소

또는 정체 야기.

- 대신 추상적 판단, 장치 고안 등 대체로 인지적(cognitive) 능력을 많이 활용하는 고속
런-고임금 일자리와 특별한 숙련을 요하지는 않지만 반복적 특성이 적어 기계화가 어려
운 성격의 저숙련 일자리는 증가 → 이들 일자리의 수요 증대는 이들 일자리에 대한 노
동공급이 따라가지 못할 경우 임금상승을 유발: 결국 중하위 임금격차의 감소, 중상위
임금격차의 증대를 결과.

- ② 국제화, 특히 해외 아웃소싱(offshoring) 가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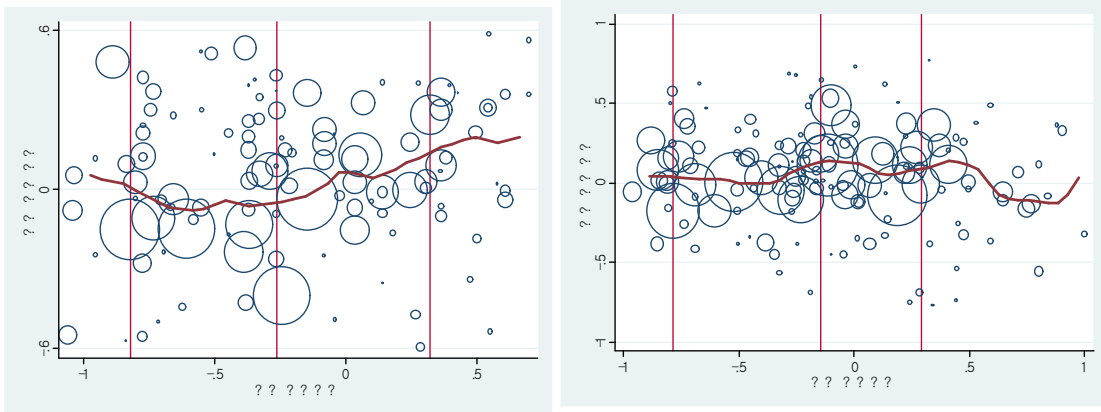
- 해외 아웃소싱은 중간재(부품) 수입, 일부 공정의 아웃소싱, 해외투자공장을 통한 생산
국제화 등의 형태를 지칭
- 국제화의 진전은 자동차 같은 최종 산출물의 교역만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재(자동
차 부품 같은)의 교역도 촉진하는데, 국내 일자리 변동에 깊은 함의를 갖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중간재 교역이라고 Feenstra & Hanson (2003)과 같은 연구에서 주장
- Blinder(2007)에 따르면, 미국에서 아웃소싱 가능한(offshorability) 일자리는 전체의
약 22~29%에 해당하며, 아웃소싱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일자리들은 이미 임금손해를 보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
- Autor, Dorn, & Hanson(2013)은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1990~2007년 사이 중국과의 수
입경쟁이 치열한 제조업 밀집 지역 노동시장에서 실업을 야기했을 뿐 아니라 경제활동
참가를 낮추고 임금도 감소시켰음을 실증
- Firpo, Fortin, & Lemieux (2011)는 1980년대와 90년대 미국 임금불평등에서 기술변화,
노조쇠퇴의 영향이 상당했지만, 특히 90년대부터는 해외 아웃소싱도 임금불평등을 설명
하는 데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분석
- 해외 아웃소싱 가능한 일자리는 기술변화의 피해를 보는 일자리와 동일한 특성을 가지
는 경향.

- ③ 소비 변화 가설

- 소득 불평등 심화로 고소득자 노동수요가 커지면서, 이들이 시간 부족으로 인해 원래는
집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할 청소, 음식을 외부 조달할 가능성이 커지고, 이를 수행할 저
숙련 노동자 수요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Mazzolari & Ragusa, 2007).

○ 국제금융위기 이후 양극화가 주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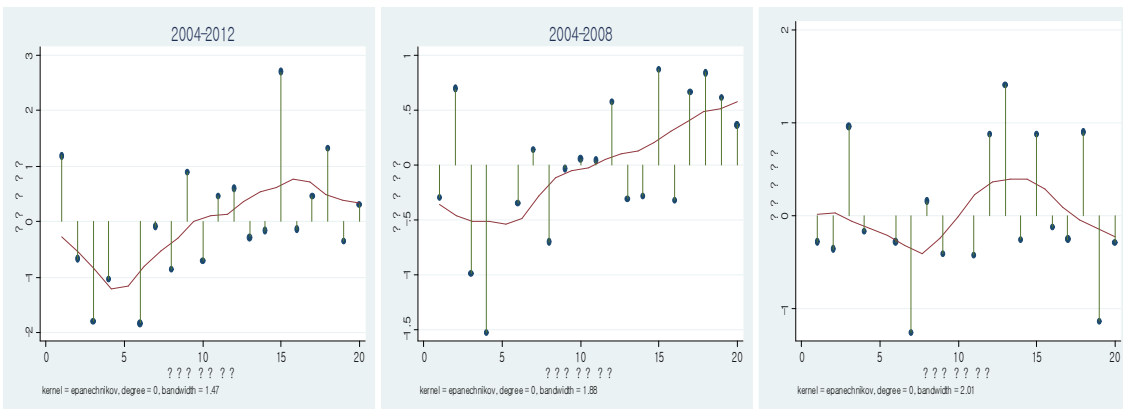
[그림 1] 중위임금별 산업×직종의 고용 몫 변화
 (임금근로자 기준, 좌측 2000-2008년, 우측 2008-2012년)



주: 2000-2008년은 구분류인 표준산업분류 8차, 표준직업분류 5차 기준. 2008-2012년은 표준 산업분류 9차, 표준직업분류 6차 기준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 대출자 비중이 매우 높은 일자리는 임금수준도 매우 높은 일자리인데, 국제금융위기 이후 고용성장세가 둔화
 - 개별 산업(대분류)×직업(대분류)별 대출자 비중이 가장 낮은 산업×직업부터 가장 높은 산업×직업까지 횡축에 순서대로 나열하고 고용 증감을 그려보면, 2008년 이전에는 대체로 대출자 비중이 높은 일자리(산업×직종) 일수록 고용 몫 증가폭이 크게 나타났지만, 2008년 이후에는 대출자 비중이 중간보다 좀 더 높은 일자리에서 고용 몫 증가폭이 크고, 그 위로 가면 고용 몫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 대체로 대출자 비중이 낮은 일자리는 임금수준도 낮지만, 제조업 조립원처럼 중간 수준의 임금을 받는 일자리도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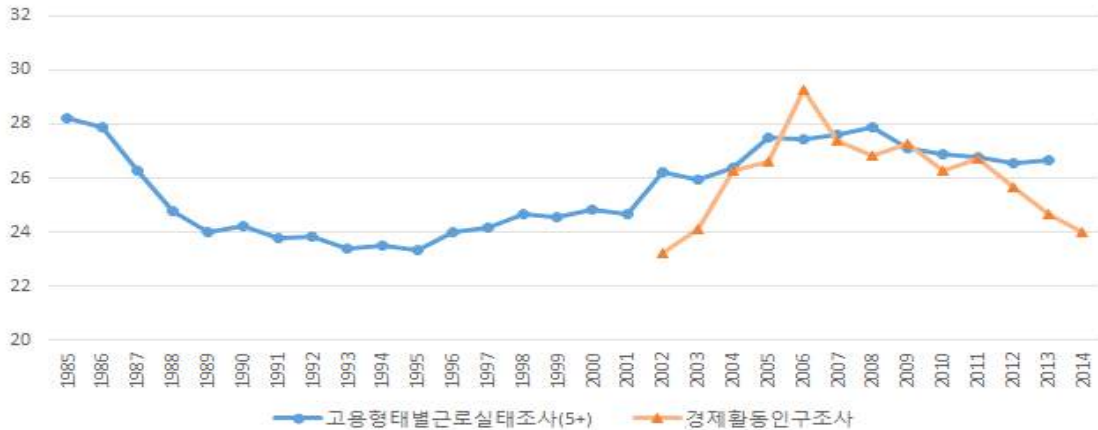
[그림 2] 대출자 비중별 산업×직종의 시기별 고용 몫 변화



주: 좌측은 2004-2012년, 가운데는 2004-2008년, 우측 그림은 2008-2012년 간 변화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 국제금융위기 전후 일자리 양극화 동향이 다름. 국제금융위기 이후 오히려 중간수준 일자리 증가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변화로 인해 국제금융위기 전후해 저임금 근로자 비중은 감소추이

[그림 3] 상대적 저임금 근로자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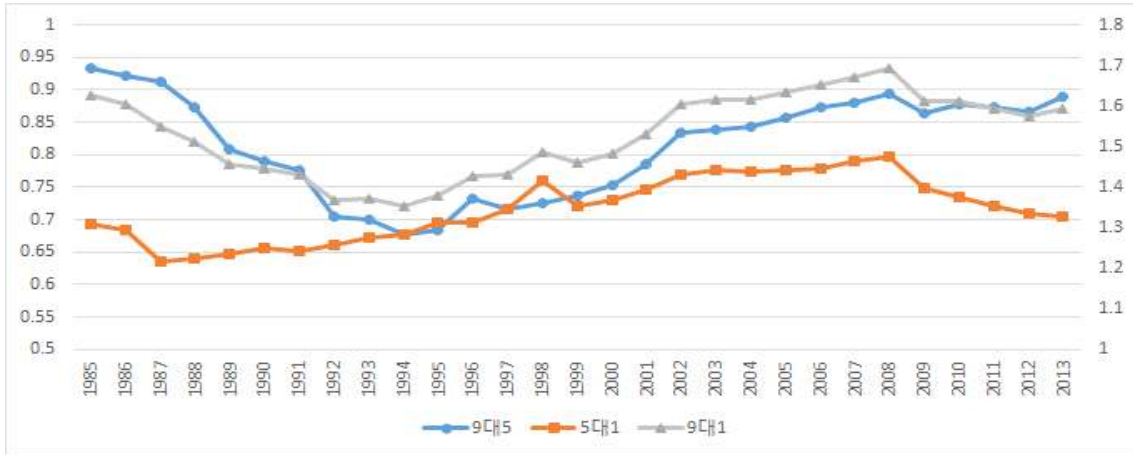


주: 수집된 자료는 월급여이므로, 이를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 후 원단위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하였음.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원자료(10+), 각년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8월 부가조사 원자료, 각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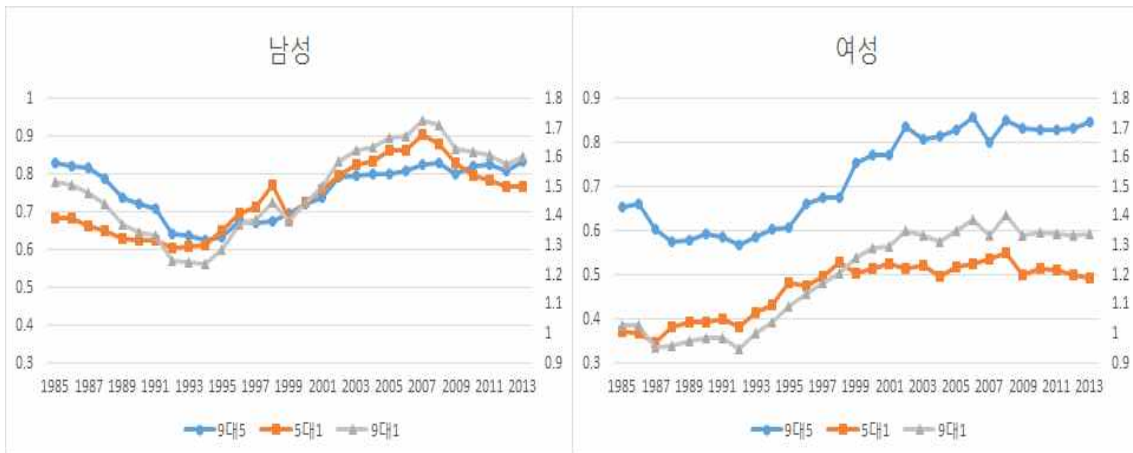
- 1990년대 초반 이래 2008년까지 증가하던 임금 불평등은 그 이후 다소 정체
 - 중상위 불평등을 보여주는 9대5 격차는 횡보, 5대비 격차는 감소,
 - 성별로 보아도 90년대 초반 이래 2008년 경까지 증가하다가 그 이후 정체 또는 하락
- ※ 임금을 크기 순서로 줄을 세워 10개의 구간으로 나눌 때 가장 낮은 첫 번째 구간에 속하는 사람들 중 가장 높은 임금을 받는 사람의 임금을 1분위 임금이라 함. 정가운데에 해당하는 사람의 임금은 다섯 번째 구간에 속하는 사람들 중 가장 높은 임금을 받는 사람의 임금인데, 이를 5분위 임금이라고 함. 9분위 임금은 9분위에 속하는 임금노동자들 중 가장 많이 버는 사람의 임금을 의미. 9대1 격차란 9분위 임금과 1분위 임금 간의 격차를 의미.

[그림 4] 임금불평등 추이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원자료(10+), 각년도

[그림 5] 성별 임금불평등 추이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원자료(10+), 각년도

2. 임금 수준별, 종사상 지위별, 고용형태별 일자리 변동

- 과거 중간 일자리는 감소하고 고임금 일자리와 저임금 일자리 중심의 고용 증대는 노동시장에 양극화를 야기하고 불평등 심화로 연결되었으나, 국제금융위기 이후 중간 임금 일자리 중심의 고용성장이 나타나 불평등이 더 심화되지 않고 정체 양상 보임
 - 2장에서는 특성별로 볼 때 고용성장이 어디서 나타나고 있는지 분석하겠음.

- 상대 저임금 기준에 따라 중위임금의 2/3 미만을 저임금으로, 3/2 이상을 고임금으로 정의하고 국제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과 2014년을 비교해보면, 저임금 계층은 27%에서 24.5%로, 고임금 계층은 28.6%에서 27.0%로 감소한 반면, 중간임금 계층은 44.5%에서 48.5%로 증가
 -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이 시기 급증한 상용직은 고임금에서 약 60만, 저임금에서 약 36만 증가한 반면, 중간임금에서 260여만 명 증가하여 중간임금 상용직 증가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
 - 임시직은 저임금에서만 약 32만 명 증가하고 나머지에선 감소.
 - 일용직은 모든 임금수준에서 감소.
 - 상용직은 1년 이상 고용계약 되어 있으며, 회사의 인사관리규칙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임금근로자로 정의됨. 국제금융위기 이후 중간임금계층에서 임금근로자가 급등한 것이 상대적으로 높은 노동비용을 유발하는 상용직이 증가할 수 있었던 배경이 되었을 것으로 추측 가능.

[표 1] 임금 수준별, 종사상 지위별 임금근로자 증감(2007년과 2014년)

		저임금		중간임금		고임금		계
2007 .3월	상용직	741	(8.8)	3,673	(43.6)	4,017	(47.6)	8,432
		(17.5)		(52.5)		(89.4)		(53.6)
	임시직	2,249	(43.4)	2,549	(49.1)	389	(7.5)	5,188
		(53.0)		(36.5)		(8.7)		(7931.4)
일용직	1,255	(59.5)	771	(36.5)	85	(4.0)	2,112	
	(29.6)		(11.0)		(1.9)		(7886.9)	
계	4,246	(27.0)	6,994	(44.5)	4,492	(28.6)	15,731	
	(100.0)		(100.0)		(100.0)		(100.0)	
2014 .3월	상용직	1,103	(9.2)	6,305	(52.4)	4,626	(38.4)	12,033
		(24.5)		(70.7)		(93.0)		(65.4)
	임시직	2,564	(52.1)	2,054	(41.7)	307	(6.2)	4,926
		(56.9)		(23.0)		(6.2)		(26.8)
일용직	837	(58.2)	562	(39.1)	39	(2.7)	1,438	
	(18.6)		(6.3)		(0.8)		(7.8)	
계	4,504	(24.5)	8,922	(48.5)	4,971	(27.0)	18,397	
	(100.0)		(100.0)		(100.0)		(100.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각년도 3월.

- 일자리 양극화가 나타났던 국제금융위기 이전에는 저임금과 고임금이 각각 23.2%→27.4%, 26.0%→28.2%로 증가한 반면 중간임금 계층은 50.7%에서 44.4%로 감소.
 - 이 기간에도 상용직이 증가하긴 했지만, 7년 간 11.8%p 증가한 국제금융위기 이후에 비하면 5년 간 6.4%p 증가하여 속도도 빠르지 않았고, 고임금 상용직 증가에 힘입은 바 큼.

[표 2] 임금 수준별, 종사상 지위별 임금근로자 증감(2002년과 2007년)

		저임금		중간임금		고임금		계
2002 .8월	상용직	465	(6.8)	3,247	(47.4)	3,139	(45.8)	6,851
		(14.3)		(45.6)		(86.0)		(48.8)
	임시직	1,662	(34.6)	2,775	(57.8)	368	(7.7)	4,806
		(51.0)		(39.0)		(10.1)		(34.3)
	일용직	1,132	(47.7)	1,098	(46.3)	143	(6.0)	2,372
		(34.7)		(15.4)		(3.9)		(16.9)
계	3,260	(23.2)	7,120	(50.7)	3,650	(26.0)	14,029	
	(100.0)		(100.0)		(100.0)		(100.0)	
2007 .8월	상용직	767	(8.8)	3,963	(45.2)	4,033	(46.0)	8,763
		(17.6)		(56.2)		(90.1)		(55.2)
	임시직	2,311	(45.8)	2,359	(46.8)	374	(7.4)	5,044
		(53.1)		(33.4)		(8.3)		(31.8)
	일용직	1,272	(61.3)	732	(35.3)	72	(3.4)	2,075
		(29.2)		(10.4)		(1.6)		(13.1)
계	4,350	(27.4)	7,055	(44.4)	4,478	(28.2)	15,882	
	(100.0)		(100.0)		(100.0)		(100.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각년도 8월.

- 산업별로 보면 과거에는 제조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에서 고임금 일자리 주로 증가(표준산업분류 구분류 기준; 8차)
 - 2007년 이후 고임금 일자리 증가폭은 거의 반토막 수준으로 줄었지만, 제조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도매 및 소매업(표준산업분류 신분류 기준; 9차)에서 주로 증가.
 - 제조업 고임금 207천 명 증가: 사무직 96천 명, 조립 90명, 기능직 24천 명 순.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고임금 184천 명 증가: 전문가 118천 명, 사무직 65천 명.
 -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광고, 여론조사, 회사본부, 컨설팅, 건축설계, 엔지니어링, 의사, 디자인, 사진촬영, 매니저, 통번역, 연구개발 등 포함됨.
 - 도매 및 소매업 고임금도 65천 명 증가: 사무직 41천 명, 전문가 29천 명.
 - 8차 분류에서 사업서비스업은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 연구 및 개발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등 포함하므로, 9차 분류의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과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의 일부를 포함하고 있었음
 - 2007년 전후를 비교하면 제조업은 비슷한 수준의 고임금 일자리 증가 유지,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도 유사한 추이 유지,

- 그렇지만, 금융 및 보험업, 교육 서비스업 등의 고임금 일자리 증가세가 꺾이면서 2007-2014년 간 고임금 일자리 증가폭 줄었음

○ 저임금 일자리는 2007-2014년 간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 317천 명 증가했지만, 2007년 이전 저임금 일자리를 주도했던 사업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도소매업, 건설업 등에서 저임금 일자리가 감소하거나 증가폭이 대폭 감소한 것이 2007-2014년 간 저임금 일자리 증가폭을 감소시킴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저임금 317천 명 증가: 서비스직 124천 명, 단순노무 86천 명, 전문가 93천 명 순.

[표 3] 임금수준별, 산업별 임금근로자 증감 (단위: 천 명)

	2002-2007년					2007-2014년			
	저임금	중간임금	고임금	계		저임금	중간임금	고임금	계
농림업	6	4	5	15	농림어업	-30	8	3	-20
어업	6	-9	-2	-5	광업	0	3	-6	-3
광업	-1	-1	6	4	제조업	-157	422	207	471
제조업	-89	-134	201	-22	전기가스	-3	8	0	5
전기가스 수도사업	2	-5	28	25	하수폐기물	-1	20	7	27
건설업	137	-34	1	103	건설업	-121	70	17	-33
도소매업	147	-96	14	65	도매 및 소매업	43	226	65	335
숙박 및 음식점업	197	-111	-5	80	운수업	-21	74	34	87
운수업	74	-67	4	11	숙박 및 음식점업	106	41	-18	129
통신업	5	1	25	31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4	55	-20	21
금융 및 보험업	13	-24	86	75	금융 및 보험업	-13	79	-6	60
부동산업 및 임대업	29	15	11	54	부동산업 및 임대업	-5	45	12	52
사업서비스업	261	212	193	66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	107	184	288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25	11	77	113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18	183	-1	164
교육서비스업	88	70	101	260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64	98	12	17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71	56	53	179	교육	-20	115	-33	62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산업	38	20	18	76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17	605	38	960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75	16	13	103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1	24	-2	23
가사서비스업	7	13	-1	19	협회 단체 수리 기타 개인서비스업	64	95	6	165
국제 및 외국기관	1	-2	1	-1	가구내 고용활동	-32	-32	-5	-69
					국제 및 외국	-1	2	-4	-2
계	1,090	-65	828	1,853	계	158	2,246	490	2,894

주: 각년도 8월 기준.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각년도 8월.

- 반면에 2007년 이전 중간임금 일자리 감소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제조업을 비롯,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2007년 이후 중간임금 일자리가 크게 증가해(각각 422천 명, 605천 명) 전체적인 중간임금 일자리 증가.
 - 제조업 중간임금 422천 명 증가: 219천 명 조립. 사무직 124천 명, 기능직 50천 명 순.
 - 도매 및 소매업 중간임금 226천 명 증가: 98천 명이 사무직, 전문가 28천 명, 판매직은 9만 명.
 -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중간 임금 107천 명 증가: 사무직 66천 명, 전문가 29천 명.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중간임금 183천 명 증가: 단순노무 72천 명, 사무직 55천 명.
 -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중간임금 605천 명 증가. 전문가 441천 명, 서비스직 82천 명, 사무직 63천 명 순
- 다음으로,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고임금 일자리 증가폭이 줄어든 2007년 이후에도 300인 이상은 277천 명 증가. 반면 저임금 일자리 증가폭이 줄어든 2007년 이후에도 1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저임금 근로자 증가.
 - 300인 이상에서 2007-2014년 간 고임금 근로자 277천 명 증가했는데,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서 54%인 150천 명 증가. 나머지는 교육서비스업에서 32천 명, 제조업에서 29천 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16천 명, 도매 및 소매업에서 12천 명 순으로 증가.
 - 중간임금근로자는 2007년 이후 전 규모에서 증가.

[표 4] 사업체 규모별 임금수준별 임금근로자 증감 (단위: 천 명)

	2002-2007년				2007-2014년			
	저임금	중간 임금	고임금	계	저임금	중간 임금	고임금	계
5인 미만	396	-169	23	249	140	306	-42	404
5~9인	316	-137	5	184	114	412	67	593
10~29인	287	102	162	551	-2	574	45	616
30~99인	82	132	212	426	-55	485	93	522
100~299인	32	34	161	228	-43	278	51	286
300인 이상	-23	-28	266	215	5	191	277	473
계	1,090	-65	828	1,853	158	2,246	490	2,894

주: 각년도 8월 기준.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각년도 8월.

- 임금 수준별로 연령대별 고용증감을 보면 25-54세는 저임금 근로자 숫자가 2007년 2,689천 명에서 2014년 2,286천 명으로 줄었으며, 15-24세와 55세 이상은 저임금 근로자 숫자가 증가

- 25-54세는 중간임금 근로자가 1,370천 명, 고임금 근로자가 272천 명 증가
- 반면에 15-24세는 중간 임금 근로자수는 거의 동일한 반면, 고임금 근로자는 44천 명 감소
- 55세 이상은 중간임금 근로자 555천 명, 고임금 근로자 480천 명 증가.
- 이로부터 보았을 때, 동 기간 크게 증가한 중간임금 근로자는 대부분 25-54세 연령층에서 증가했으며, 고임금 근로자는 25-54세와 55세 이상 연령층에서 고루 증가.
- 25-54세 연령층은 저임금 근로자가 감소하였는데, 이들이 빠져나간 저임금 일자리는 노동 시장 진입연령대인 15-24세와 은퇴연령대인 55세 이상 연령대에서 채운 것으로 나타남

[표 5] 임금 수준별, 연령대별 임금근로자 증감(2007년과 2014년)

		15-24세		25-54세		55세 이상		계
2007.3 월	저임금	580	(13.7)	2,689	(63.3)	977	(23.0)	4,246
		(42.0)		(21.4)		(54.5)		(27.0)
	중간임금	726	(10.4)	5,738	(82.1)	530	(7.6)	6,994
		(52.6)		(45.7)		(29.6)		(44.5)
고임금	74	(1.7)	4,133	(92.0)	285	(6.3)	4,492	
	(5.4)		(32.9)		(15.9)		(28.6)	
계	1,380	(8.8)	12,559	(79.8)	1,792	(11.4)	15,731	
	(100.0)		(100.0)		(100.0)		(100.0)	
2014.3 월	저임금	669	(14.9)	2,286	(50.8)	1,549	(34.4)	4,504
		(46.8)		(16.6)		(48.9)		(24.5)
	중간임금	728	(8.2)	7,109	(79.7)	1,085	(12.2)	8,922
		(51.0)		(51.5)		(34.2)		(48.5)
고임금	31	(0.6)	4,405	(88.6)	536	(10.8)	4,971	
	(2.1)		(31.9)		(16.9)		(27.0)	
계	1,428	(7.8)	13,799	(75.0)	3,170	(17.2)	18,397	
	(100.0)		(100.0)		(100.0)		(100.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각년도 3월.

[표 6] 연령구간별, 직업별 임금근로자 2007년 3월과 2014년 3월 간 증감 (단위:천 명)

	임금근로자 증감			저임금근로자 증감		
	15~24세	25~54세	55세 이상	15~24세	25~54세	55세 이상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6	819	151	-1	33	21
사무 종사자	-49	769	144	-20	15	28
서비스 종사자	106	27	205	103	-64	120
판매 종사자	22	68	73	31	20	30
기능원/관련기능 종사자	-24	-250	140	-13	-146	-2
장치/기계조작/조립 종사자	15	140	179	-4	-49	36
단순노무 종사자	-11	-275	468	-8	-203	351
전 체	48	1,240	1,378	89	-403	572

주: 전체에는 관리자와 농림어업 숙련근로자 포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

- 15~24세는 저임금근로자가 89천 명 증가했는데, 모두 서비스 종사자에서 증가
 - 55세 이상 저임금 근로자는 572천 명 증가했는데, 서비스 종사자와 단순노무 종사자에서 주로 증가(471천 명↑)
 - 25~54세는 저임금근로자가 403천 명 감소하였는데, 주로 단순노무,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에서 감소하였음

- 2004년에서 2013년으로 분석대상 시기를 넓혀서 보아도 전문가, 사무직업군이 전체적인 일자리 성장을 이끄는 가운데, 이 두 직업군은 25~54세에서 가장 큰 폭의 증가를 보였고, 동시에 이 연령대에서는 국제금융위기 이전에는 저임금 직업군이라 할 수 있는 단순노무직은 소폭 증가했을 뿐이고, 또 다른 저임금 직업군인 서비스 종사자 직업군은 거의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음.
 - 15~24세는 2004년과 2008년을 비교해볼 경우 모든 직업군에서 감소했지만, 국제금융위기 이후에는 저임금 직업군인 단순노무, 서비스종사자, 그리고 판매종사자 직업군에서만 증가.
 - 국제금융위기 이후 제조업 성장을 반영하여 2008년 이후 조립원 직업군은 전 연령대에서 증가. 특히 55세 이상에서 많이 증가하였음.

[표 7] 직업별, 연령별 취업자 변화 (단위: 천 명)

	15-24세				25-54세				55세 이상			
	2004	2007	2008	2013	2004	2007	2008	2013	2004	2007	2008	2013
관리직	1	0		1	476	478	430	283	123	123	119	119
전문가	430	340	342	352	2,868	3,480	3,764	4,231	167	230	277	383
사무직	461	356	320	268	2,729	2,898	3,039	3,692	108	134	127	258
서비스	311	271	275	319	1,992	1,956	1,991	1,700	294	359	389	556
판매	276	229	205	246	2,485	2,373	2,325	2,188	444	509	478	598
농어업	11	9	7	12	578	505	469	350	1,108	1,106	1,093	1,065
기능	82	65	53	45	2,018	1,994	1,957	1,711	257	297	322	465
조립	192	84	77	98	2,137	2,205	2,121	2,195	260	364	394	705
단순노무	217	169	131	163	1,632	1,791	1,768	1,538	904	1,108	1,107	1,527
계	1,981	1,524	1,410	1,502	16,914	17,680	17,862	17,888	3,663	4,229	4,306	5,676

- 전문가, 사무직 증가는 대부분의 업종에서 관찰됨.
 - 제조업은 2008년 이전에는 총고용 감소하는 가운데 전문가+사무직은 다소 증가, 조립+기능직은 감소. 국제금융위기 이후에는 총고용 증가하는 가운데 전문가+사무직은 증가, 조립+기능직도 증가.
 - 보건 및 사회복지는 전문가 중심의 고용성장 지속되는 가운데 국제금융위기 이후 서비스 종사자도 크게 증가.
 - 도소매업은 2008년 이전에는 총고용 감소, 가장 중요한 판매종사자 감소, 반면에 전문가

와 단순노무 증가, 사무직 유지. 국제금융위기 이후에도 판매종사자는 감소했지만, 사무직> 단순노무> 전문가 순으로 증가

[표 8] 주요 업종의 직업별 고용성장 (단위: 천 명)

	제조업				보건 및 사회복지			
	2004	2007	2008	2013	2004	2007	2008	2013
관리직	150	165	129	83	6	9	11	16
전문가	366	441	437	435	403	484	583	1,000
사무직	671	665	663	800	84	85	84	151
서비스	25	19	19	8	40	64	82	245
판매	104	98	81	89	2	1	1	4
농어업	1	0	0	1		0	0	0
기능	925	808	859	752	3	12	12	8
조립	1,344	1,277	1,231	1,498	11	11	12	19
단순노무	592	541	544	519	41	73	58	111
계	4,177	4,014	3,963	4,184	590	740	842	1,554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관리직	79	72	69	35	25	25	23	21
전문가	147	162	200	233	10	16	16	18
사무직	426	406	421	535	31	40	37	37
서비스	19	14	13	17	1,705	1,637	1,647	1,377
판매	2,684	2,508	2,432	2,316	49	58	59	156
농어업	1	2	0	0	0	0	1	0
기능	54	81	61	75	23	23	21	30
조립	70	87	82	57	8	4	6	6
단순노무	323	342	354	392	207	245	236	326
계	3,802	3,673	3,632	3,660	2,057	2,049	2,044	1,970

○ 이상의 분석은 중간임금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면서 저임금 일자리가 다소 위축되는 가운데, 중간임금 일자리로 핵심 연령대라 할 수 있는 25-54세가 주로 흡수되고, 노동시장 진입연령대와 은퇴연령대가 이들이 빠져나간 저임금 일자리로 유입되는 것이 국제금융위기 이후 나타나는 특징임을 보여줌

○ 중간임금 일자리에 중핵연령대가 주로 유입되고 있다는 점은 비정규직 역시 저임금 일자리로의 집중 가능성을 높이는데, 실제 2007년과 2014년을 비교해보면 비정규직 일자리는 비중으로 볼 때 저임금에서 증가(53.2%→55.2%)하고, 중간임금이나 고임금은 보다 정규직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각각 63.8%→69.2%, 78.2%→86.4%) 나타남.

※ 다만, 사내하청 같은 간접고용은 통계청 조사로 충분히 드러나지 않음에 주의

[표 9] 임금수준별.비정규직 여부별 임금근로자 2007년 3월과 2014년 3월 간 증감

(단위: 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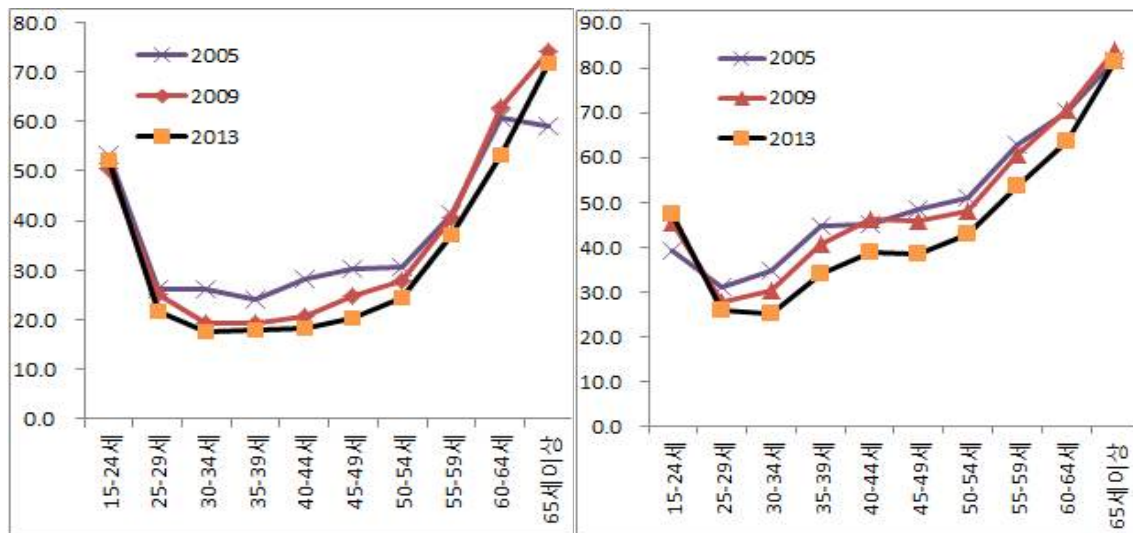
	2007년				2014년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비정규직	
저임금	1,985	(46.8)	2,261	(53.2)	2,016	(44.8)	2,488	(55.2)
	(19.9)		(39.2)		(16.1)		(42.1)	
중간임금	4,459	(63.8)	2,535	(36.2)	6,174	(69.2)	2,748	(30.8)
	(44.8)		(43.9)		(49.4)		(46.5)	
고임금	3,515	(78.2)	977	(21.8)	4,296	(86.4)	675	(13.6)
	(35.3)		(16.9)		(34.4)		(11.4)	
계	9,958	(63.3)	5,773	(36.7)	12,486	(67.9)	5,911	(32.1)
	(100.0)		(100.0)		(100.0)		(100.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년도 3월.

- 연령별로 보아도 저임금 근로자의 경우와 유사하게 비정규직 비중은 중책연령대에서는 감소하고, 진입연령대와 65세 이상에서는 큰 변화 없이 유지되는 경향 나타남.

[그림 6] 연령별.성별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의 연도별 변화(남성 좌, 여성 우)

(단위: %)



주: 왼쪽이 남성, 오른쪽이 여성.

자료: 정성미·성재민, 2014,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통해 본 2013년 비정규직 노동시장의 특징, 노동리뷰 1월호, 한국노동연구원(8월 기준)

- 이와 같이 국제금융위기 이후 중간임금 일자리 증가는 보다 높은 임금의 일자리가 필요한 중책연령대의 중간임금일자리로의 이동과 이들이 떠난 저임금 일자리를 진입연령대와 은퇴 연령대가 채우는 양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 이와 같은 일자리 기회의 창출로 인해 비정규직이 중핵연령대에서 감소하면서 전체적인 비정규직 규모 감소로 이어지고, 상용직은 급증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이렇게 중핵연령대에서 비정규직이 줄고, 진입 및 은퇴연령대에서 유지되면 정규직과의 임금격차가 증가하는 것으로 귀결될 것임
 - 이 요인에 의한 격차 증가는 차별의 증가가 아니라, 임금이 낮은 곳에 비정규직이 더 집중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임
 - 실제 비정규직 임금격차는 국제금융위기 당시 크게 확대되었다가 2013년 현재까지도 2007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음

[표 10] 근로형태별 임금수준(시간당) (단위: %)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정규직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비정규직	71.6	73.5	70.5	71.0	70.9	68.0	61.5	62.5	65.3	64.3	64.8

주: 정규직 임금을 100으로 했을 경우 상대수준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연도 8월.

- 상대임금격차가 국제금융위기 이전보다 커져서 여전히 이전 수준으로 증가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살펴보기 위해 Juhn, Murphy & Pierce¹⁾가 개발한 분석방법을 활용해 임금격차 분해를 해 보면, 임금격차 강화가 차별의 증가 때문은 아니며, 비정규직 인적 구성 변화 - 여성에서 상대적으로 더 증가, 저연령층과 고령층에서의 증가 - 가 중요한 원인인 것으로 나타남
 - 비교 대상시기는 2007년 8월, 2012년 8월, 2013년 8월
 - 표에서 가격 변화가 차별과 관련. 같은 인적자본이라면 인적자본에 따른 가격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다를 이유가 없기 때문. 결과를 보면 전체 변화를 100이라 볼 때 통제변수로 무엇을 이용하는가에 관계없이 구성변화효과의 역할이 큰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어떤 구성요인이 중요했는지를 보면, 연령과 성별의 분포변화 만으로도 2007년 8월과 2013년 8월 간 임금격차 증가분(12.5%p, 단, 로그 포인트 격차임) 중 11.4%p가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남. 거의 전부가 설명되는 것임
 - 여기에 근속, 학력, 직·산업 등을 추가하는 것은 12.6%p로 격차 증가의 전부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12년 8월과 2013년 8월을 비교해 보면 연령분포 변화는 전체 격차 증가 0.44%p(이는 로그 포인트임) 중 0.26%p를 설명해 절반 이상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남, 여기에 성별과 학

1) Blau, F. and L. Kahn, 1996, "Wage Structure and Gender Earnings Differentials: An International Comparison", *Economica*, Vol. 63, No. 250에서 이용된 방법을 따랐음.

력을 추가하면 0.36%p를 설명해 격차 증가의 약 80% 정도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근속, 직·산업을 추가하면 격차가 1.1%p 증가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체 격차 증가를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됨

[표 11] 시기별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 변화 분해(시간당 임금)

		통제변수의 구성변화로 설명되는 부분	통제변수의 가격변화로 설명되는 부분	미관측 구성변화로 설명되는 부분	미관측 가격변화로 설명되는 부분	총구성변화 효과	총가격변화 효과
'12.8 ~ '13.8	연령·성(가)	0.0070	-0.0024	-0.0024	0.0022	0.0046 (103.7%)	-0.0002 (-3.7%)
	(가)+교육, 근 속, 직산업	0.0030	-0.0058	0.0076	-0.0004	0.0106 (237.6%)	-0.0061 (-137.6%)
'07.8 ~ '13.8	연령·성	0.0741	0.0053	0.0395	0.0062	0.1136 (90.8%)	0.0115 (9.2%)
	(가)+직산업	0.1018	-0.0007	0.0237	0.0003	0.1255 (100.3%)	-0.0004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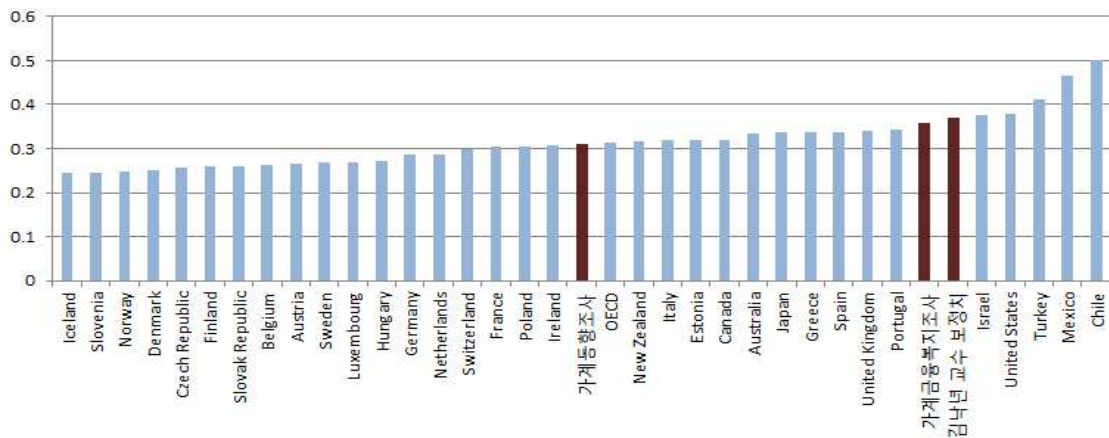
주: 각 년도 3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계산. 실질시간당 임금에 로그를 취해 종속변수로 이용했으며, 연령은 연령 및 연령 제곱, 근속은 근속 개월 그대로, 여성 비중은 여성 더미, 학력은 초졸을 기준으로 중졸, 고졸,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 이상 더미, 산업은 산업대분류(제조업 기준), 직종은 직종대분류(단순 노무자 기준)로 하여 회귀식을 추정하였음. 회귀식 추정결과 보고는 원고 분량 상 생략하였음.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3. 정책 함의

- OECD는 최근 “Focus on inequality and Growth”를 통해 소득 불평등 증가는 경제성장을 해친다는 보고서 발표
 - 이와 유사한 보고서는 IMF에서도 국제금융위기 이후 꾸준히 발간되고 있음
 - 우리나라는 가구 소득 기준으로 OECD 평균에 못미치는, 불평등이 심하지 않은 나라라는 인식이 있었지만, 김낙년 교수의 보정치,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이러한 인식이 바뀌고 있음

[그림 7] OECD 국가들의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2000년대 후반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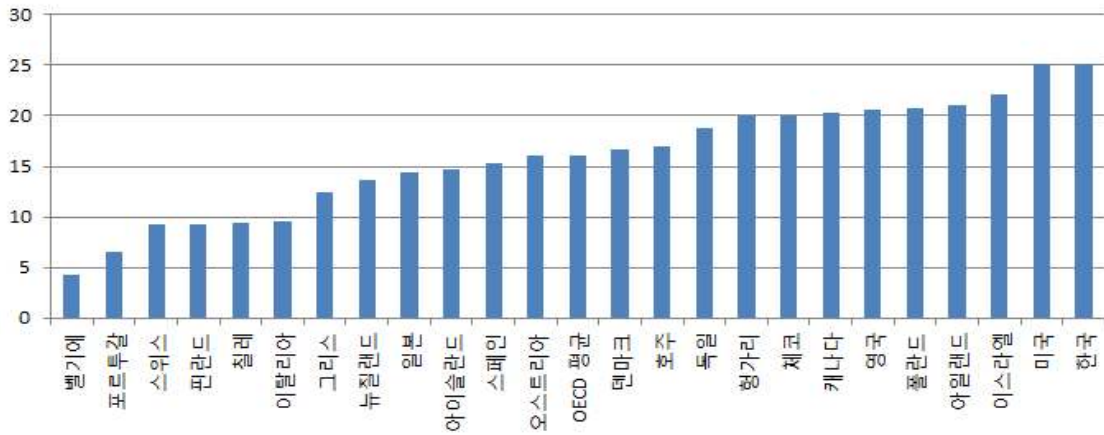


주: “가계동향조사”가 우리나라가 OECD에 보고하는 기준.

자료: OECD STAT.

- 임금불평등, 저임금 수준은 OECD 안에서 이미 아주 높은 수준.
- OECD의 “Focus on inequality and Growth”(2014)는 경제가 빨리 성장하면 사회 전계층의 소득이 증가하는 trickle down effect가 사라지고 있다고 경고
 - 불평등이 증가하면서 중하위 소득계층의 인적자본 투자가 어려움을 겪고, 이로 인해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감소해, 장기적으로 불평등 증가가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효과를 낳고 있다고 실증분석 결과 제시
 - “불평등은 사회통합만 저해 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성장도 저해한다”
- 동 보고서는 중하위 40%와 상위 그룹 간 소득 격차 증가가 특히 해롭다고 강조.
 - 미국의 경우 복지정책의 초점이 최하위 10% 미만 저소득 계층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와 같은 저소득 계층에만 초점을 맞추면 안되고 중하위 소득 계층 전체의 소득 상승에 초점을 두어야 경제성장 저해 효과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

[그림 8] OECD국가들의 저임금 근로자 비중(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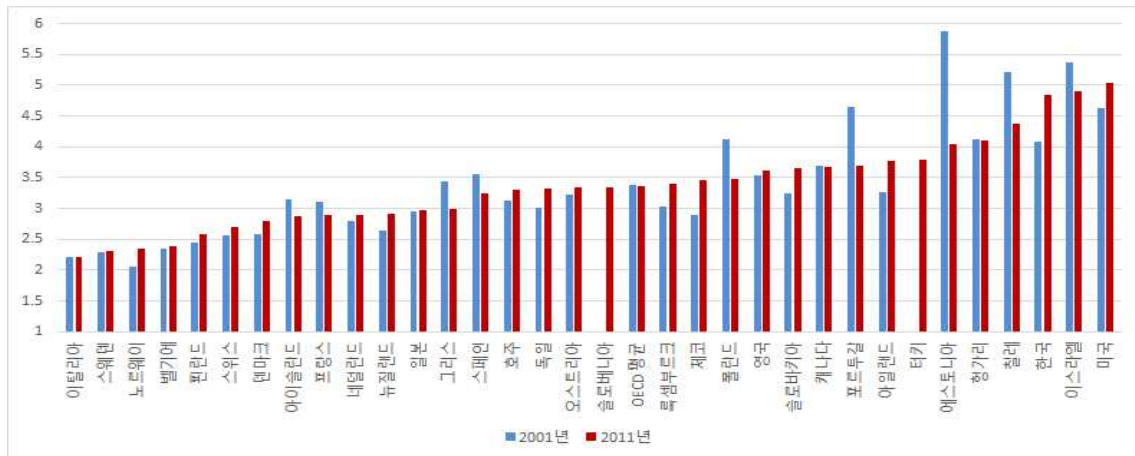


주: OECD 국가들 중 저임금 비중을 보고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추정. 2011년 기준.

자료: Online OECD Employment database,

<http://www.oecd.org/employment/emp/onlineoecdemploymentdatabase.htm#earndisp>

[그림 9] OECD 국가들의 9대1 격차



주: 임금을 크기 순서로 줄을 세워 10개의 구간으로 나눌 때 가장 낮은 첫 번째 구간에 속하는 사람들 중 가장 높은 임금을 받는 사람의 임금을 1분위 임금이라 함. 정가운데에 해당하는 사람의 임금은 다섯 번째 구간에 속하는 사람들 중 가장 높은 임금을 받는 사람의 임금인데, 이를 5분위 임금이라고 함. 9분위 임금은 9분위에 속하는 임금노동자들 중 가장 많이 버는 사람의 임금을 의미. 9대1 격차란 9분위 임금과 1분위 임금 간의 격차를 의미.

자료: OECD, 2013, Employment Outlook.

- 일부 부문의 경제성장이 전체 가구 소득의 증가로 이어지던 시대가 종료되면서 노동소득 분배율이 하락하고 불평등이 심화

- 그런데, 가계소득이 증가하면 성장이 이루어진다/ 가계소득이 증가하면 살만하게 된다는 답론도 실제 중요한 것은 소득의 성장률 자체가 아니라 불평등 저해 방지라는 점을 놓치지 않게 만들 수 있음
- 표 1은 소득 계층별 임금성장률에 따라 전체 임금성장률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보여줌. 다소 극단적인 예이긴 한데, 가상의 임금증가율(가)는 임금이 높은 계층일수록 더 많이 임금이 증가할 경우의 전체 임금 증가율, (나)는 임금이 낮은 계층일수록 더 많이 임금이 증가할 경우의 전체 임금 증가율임.
- 이를 보면 (가)가 (나)보다 약 두 배 가량 높은 임금증가율 보여줌.
- (가)는 국제금융위기 이전(노무현 정부), (나)는 국제금융위기 이후 상황을 보여준다 할 수 있음. 임금 증가율이 고임금일수록 높다면, 저임금일수록 높은 경우에 비해 총계로서의 임금증가율은 훨씬 높게 나타날 수 있음.
- 이와 같이 임금 성장률이 높다고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라는 점은, 노무현 정부 때 양극화가 심화된 점으로부터 알 수 있음
- 낮은 임금 인상이 민간소비 둔화의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곤 하는데, 고임금 계층의 낮은 한계소비성향 등을 감안하면 고임금 계층 주도적인 임금 상승 증가가 반드시 내수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함. 전체적인 임금 증가율이 높(낮)기 때문에 민간 소비 성장이 클(작) 것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으며, 소득 계층별 소비구조를 보아야 좀 더 정교하게 내수성장에 대한 영향을 파악할 수 있을 것임

[표 12] 임금계층별 성장률 차이가 전체 임금 인상률에 주는 영향

	임금(만 원)	가상의 임금증가율(가)	가상의 임금증가율(나)
상위 1분위	1,000	10%	1%
2분위	750	8%	3%
3분위	530	5%	5%
4분위	260	3%	8%
5분위	110	1%	10%
평균임금(만 원)	530	569	548
평균임금 증가율		7.4%	3.4%

- 즉, 정책적 초점은 중하위의 소득을 어떻게 진작시킬 것인가에 맞춰져야 함.
- 내수 서비스 부문으로 추정되는 산업부문에서 중간 수준 일자리 크게 증가
→ 수출 중심의 경제정책에서 탈피할 필요성
- 또한, 전문가, 사무직 중심의 일자리 증가라는 측면도 주목할 필요 있음
→ 대졸자 감소를 목표로 하기보다는 고등교육에 대한 접근이 평등하게 이루어지는 정책(<-

부의 대물림으로 고임금 일자리에 일부 계층의 접근성만 높아지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고등교육의 질을 전반적으로 높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함.

→ 고졸자나 전문대졸자 양적 증대는 우리나라 노동시장 상황에서 저숙련 일자리로의 노동 공급을 늘려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증가를 저해할 수 있음

물론, 직업교육을 거쳐 고졸자가 마이스터가 되어서 중산층 생활을 향유하는, 독일 식에 가까운 생애직업교육훈련, 자격 시스템 개편 등 경로를 제시하려는 노력은 꾸준히 추진되어야 함

○ 현재의 저임금은 아닌 중하위 임금 일자리 증대에서 일자리 창출을 주도하는 강력한 힘이 사회복지 중심의 한 정부의 사회서비스 부문 재정 지출 증대로부터 나오고 있음

→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이와 같은 재정투입 증대는 불가피하기 때문에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정부가 관련 부문에서 재정부담 때문에 역할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역할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

○ 이 글에서 따로 다루지는 않았지만, 전체적인 임금상승률에 비교해 약 2배 가량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2010년 제외)도 하위 임금을 인상시키는 중요한 힘으로 작용해 불평등 악화를 막고 있음(성재민, 2014).

→ 최저임금의 중요성

○ 비정규직에 대한 개별적인 대책, 원하청 문제가 있으니 공정위를 동원하는 등의 대책은 중요하긴 하지만 실제 정책 실현/ 집행과정에서는 여러 어려움이 있으며, 어떻게 하면 전체적인 중하위 소득 계층의 임금을 더 많이 상승시킬 것인가(최저임금의 인상 같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일자리를 이 분야에서 창출해낼 것인가(정부의 재정지출/ 사회복지 수요나 늘어난 행정수요에 맞춰 공공부문 일자리를 서구 수준으로 늘리려는 노력)에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교훈을 줌

○ 과거 중간 수준 일자리가 감소하던 시기에는 불평등이 급증하다가 중간 수준 일자리가 증가하면서 불평등 정체

- 노동시장에 오는 충격이 임금 불평등으로 곧바로 나타나는 시스템

- 노동시장의 충격을 완화할 제도의 부재 때문

→ 많은 OECD 국가들에서 일자리 양극화가 나타났지만, 임금불평등이 모든 나라에서 나타나는 않았음. 초기업단위 단체교섭, 단체교섭 효력확장 제도 같은 임금 조정 제도가 중요한 완충역할 수행할 수 있음.

< 메모하세요 >

<토론문 1>

노동시장 변화와 노동정책

이시균(한국고용정보원 인력수급전망센터 센터장)

1. 소득불평등과 양극화

- 비정규직, 비공식고용, 영세중소기업 등 광범위한 주변부 존재
 - 노동소득분배율이 미국 보다 10% 정도 낮은 수준
 - 높은 저임금고용 비중
 - 엄청난 노동력 변동률(채용+이직)
 - 내수비중이 낮은 경제구조
- 노동시장의 분절화
 - 성별, 학력별, 고용형태별 차별 존재(임금 및 고용)
 - 청년층의 노동시장 근착도 저하 및 장기 취업준비 기간(남성 1년)
 - 비정규직, 주변부의 함정성

2. 최근의 현상

- 제조업 고용증가, 사회복지 분야의 확대
 - 고용증가 및 중간 일자리 확대에 의한 양극화 개선, 특히 제조업 성장과 고용의 동조화 현상으로 인해 양극화 개선에 기여
 - 사회복지수요의 확대 및 성장으로 인해 고용증가 주도
- 저출산,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증대로 인한 디플레이션 위험 증대는 보수적 정부하에서도 내수진작 정책 필요성 대두
 - 경제단체 등의 반발로 인해 소득분배 개선 정책에 근본적 한계
 - 내수진작을 위한 전체 대상에 대한 소득분배정책은 실패한 상황에서 최저임금 상승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3. 정책효과

- 최저임금, 실업급여 등 고용정책 제한적인 효과
 - 최저임금, 실업급여,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여성 고용정책 등 긍정적 정책효과를 보이
나, 고용구조의 개선수단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 이유는 제도의 설계가 보수적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임

- 정부규제, 조세정책, 노조의 효과는 요원
 - 비정규직 확산을 막는 사유제한 규제가 강력한 효과를 가지나, 도입하기 어려울 것이며,
 - 조세개혁 역시 거의 불가능한 영역, 특히 부자감세로 인한 세수부족은 경제성장률 저하의
주된 요인이 되고 있음.
 - 노조 역시 조직률이 하락추세이며, 산별교섭 등 단체교섭 수준도 여전히 정체

< 메모하세요 >

<토론문 2>

별첨

김철식(연세대학교 동서문제 연구원 전문연구원)

< 메모하세요 >

< 메모하세요 >